

# 7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7월 1일 목요일

<b>01</b>	<b>세계경제</b>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b>04</b>	<b>세계정세</b>	중국 노동자 파업
<b>05</b>	<b>한국정세</b>	천안함 의혹 7가지 뉴스 공동지방정부 착수 백두산 대폭발, 다시 초읽기?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명 체포 기타

## ■ 세계경제

### 1.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년 6월 27일)

#### 1) 국제경제와 경제구조

□ (재정 건전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의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최근 선진국이 정량적 목표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약속했음을 확인

\* 3대 일반원칙: i)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credible), ii)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iii)이러한 중기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발표

\* (재정적자) 적어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정부채무비율)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

□ (글로벌 재균형) 글로벌 재균형을 위한 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 이에 따라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함. 또한,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신흥 흑자국은 i)사회안전망 강화, ii)인프라 지출 확대, iii)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함.

□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합의.

#### 2) 금융규제

□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 FSB가 서울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특히, 금년말까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복 및 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마련.

□ (금융권 분담방안)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 합의. 일부 국가들은 금융부담금을 추진하고, 일부 국가들은 다른 접근방법(규제강화, 조건부 자본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시

□ (정리체계) 납세자 부담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과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정리체계를 구축.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필요시 각국의 정리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

□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기합의 사항의 이행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 이에 대한 FSB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특히, 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BCBS와 FSB가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 (이행점검체계) FSB의 국가별·주제별 상호점검(peer review)과 IMF/WB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

□ (회계기준) 회계기준 수립일정을 2011년말로 조정\*하고 IASB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2011.6월까지 회계기준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최근 IASB와 FASB가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

3) 국제금융기구 개혁

□ (IMF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IMF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사항을 합의. IMF 쿼타개혁 시한을 서울정상회의시로 단축( '11.1월 → ' 10.11월)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병행추진(in parallel deliver). '08년 합의된 IMF 개혁안\* 기준을 서울정상회의까지 완료(쿼타비중 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

□ (WB 투표권 개혁) 세계은행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총 4.59% 이전하는 투표권 개혁에 합의한 것을 환영. 선진·개도국간 동등한 투표권과 빈소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태적 지분공식을 마련할 것을 약속(각 나라의 경제적 비중과 세계은행의 개발 임무를 반영.)

□ (MDB 재원확충) 다자개발은행의 3,500억불 증자 합의를 환영. IDA, ADF 등 양허성 자금기구의 충분한 재원보충을 약속.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 관련 주요 일정>

일시	일정	장소
7월	G20 Sherpa 회의	서울
9.4-5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광주
10월	G20 Sherpa 회의	미정
10.22-2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 10.21-22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경주
11.11-12	G20 정상회의	서울

\* 10.8-9 IMF/World Bank 연차총회 (워싱턴 D.C, 미국) 계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잠정)

2.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 해외경제정보 제2010-26호 2010. 6. 30.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인프라 투자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 2009년 3월 발표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내용을 보면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농촌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투자사업의 비중이 82%로서 절대적.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09년 8.7%, 2010년 1/4분기 11.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 투자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2009년중 투자의 성장기여율이 94.6%로 개혁개방 이후 최고수준.

-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국가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중국은 재정상황이 건전하여 이러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지방공사를 통한 차입을 크게 늘려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재정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 더구나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함께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의 건전성도 훼손될 우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 그 실상을 점검해 볼 필요.

1) 지방정부의 부채: 지방공사의 부채

- 지방정부 예산은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지방채 발행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부채규모가 클 수 없음. (지방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이나 국무원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

- 기금은 토지사용권판매기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 2009년 기준 동 기금의 비중은 수입이 88.2%, 지출이 86.3%) 한편 수입중 약 40% 정도가 해당토지에 살던 거주자의 보상금으로 지출되며 나머지 60%는 토지 개발, 인프라 건설 등 투자성 지출에 투입.

-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지방정부가 투자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방정부융자플랫폼공사(地方政府融資平台公司, 이하 지방공사로 약칭)”을 통한 우회적 채원 조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판매기금」만을 채원으로 투자할 경우 그 규모는 1조위안을 넘기 어렵지만 지방정부는 높은 지역개발 욕구

등으로 그 이상의 투자를 실행하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 특히 2009년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된 것을 계기로 지방정부는 그 동안 지연되어 왔던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은행차입이 대폭 확대. 지방공사의 차입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명시적·묵시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공사 부채는 지방정부 부채로 보아야 함.

- 그동안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공식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의 류민강 주석은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잔액이 2009년말 기준 7.38조 위안으로 전년말대비 70.4% 증가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2009년중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은 3.1조 위안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전체은행의 신규대출(9.59조위안)중 3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2) 지방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

- (단기적 리스크 :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토지사용권판매수입 감소, 지방채정 부실화 우려로 인한 규제강화 등으로 지방정부의 투자채원이 줄어들 가능성. 인프라투자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비중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투자위축은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투자위축 리스크가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중국경제가 수출위주의 성장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 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중장기적 리스크 : 지방정부와 은행시스템의 부실화)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억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후속대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2~3년간 지방공사의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도로·하천(댐건설) 등은 사용료 징수가 쉽지 않고 철도·전력 인프라는 수익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지방공사의 자체수입만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을 제공한 지방정부가 대신 상환해주어야 할 가능성.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방공사의 원리금 대납채원은 「토지사용권판매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경직성 경비인 거주자 보상금을 제외한 전액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 한편 지방정부가 지방공사의 부채를 대납할 수 없게 되면 이중 상당부분이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남게 될 가능성. 2009년말 현재 중국의 상업은행 부실대출(NPL) 규모 및 비율은 각각 0.5조위안, 1.6%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2009년말 현재 7.4조위안)중 일부가 부실화될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올라갈 우려. 특히 관련 대출의 만기가 집중 도래하는 2012년 이후 은행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전망.

3) 과제

- 지방채 발행 허용: 중국은 중서부지역 개발, 도시화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투자 자금 수요가 높을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 토지사용권판매기금」에 대한 관리 강화: 재정당국은 과거 예산외로 운용되던 토지사용권판매수입을 2007년 이후 지방정부 기금예산에 포함시키는 등 재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지방세 세원 발굴: 부동산보유세, 천연자원세 등을 도입하여 이를 방세에 편입시킴으로써 토지사용권판매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재정구조를 시정

## ■ 국제정세

### 1. 중국 노동자 파업

#### 1) 중국 노동자 파업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세계 최대 전자부품업체 팍스콘 노동자들이 연쇄 자살 시도. 생산직 노동자 월급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 팍스콘은 애플, 소니 등 외국 회사의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대만 회사.

중국 광둥성 포산시 소재 난하이 혼다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들 1800여명이 5월 17일부터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사측이 24% 가량의 임금 인상에 합의, 6월 4일에 파업 중단.

이 파업이 성공하자 다른 공장들로 확산. 혼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곳, 팍스콘을 비롯, 중국 전역의 여러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 광치혼다자동차의 광둥성 소재 공장 2곳, 후베이성의 등평혼다자동차, 광둥성의 수출용 공장 등 4곳이 중단, 또는 생산에 차질. 포산시 소재 포산평푸자동차부품회사의 노동자들도 6월 7일부터 파업, 혼다자동차 생산에 영향.

북부 대도시 텐진의 도요타자동차 공장 두 곳, 상하이의 샤프전자 공장, 장쑤성 우시의 니콘카메라 공장, 산둥 짜오좡방직 등에서도 파업. 6월 8일에는 장쑤성 쿤산의 대만계 노동자 2000여명이 임금 인상 요구하며 가두 행진 벌이다 경찰과 충돌, 50여명이 부상.

#### 2) 경제파업에서 정치파업으로

중국의 노조파업은 임금인상 요구에서 자유 노조결성 등 정치파업으로 옮겨가고 있음. 6월 7일부터, 혼다차 중국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혼다룩(광둥 중산)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외에도 법으로 금지된 노조결성을 요구하면서 파업. 이들은 6월 7일부터 파업. 스스로 교섭대표 선정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노조결성을 요구(한국경제).

중국 정부는 이해적으로 외자기업들의 파업을 방관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노조결성을 용인해주지는 않을 것. 현재 중국 정부는 섬유, 신발 등 전통적인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복지위원회 등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중국 지방 정부들은 재작년부터 외자기업에 신노동법, 환경법, 소방법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 개별 사업장들에 노조 설립과 임금 인상을 촉구. 중국 중앙 정부는 올 들어 각 지방 정부에 초저 임금 표준을 인상하라고 독려. 이전과 달리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의 교섭력 높여주는 방향. 그러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교섭력 향상은 한계. 중국 정부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의 교섭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파업권을 갖는 것은 부담을 느낌. 파업이 확산되면서 중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짐. 현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연쇄 파업을 허용하지 않아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을 것(경향신문).

#### 3) 임금 인상

팍스콘은 임금 30%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올 10월부터는 노동자 80만명 중 다수에게 100%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일본 혼다자동차는 광둥성 부품공장 파업에 임금 33% 인상 약속. 세계 최대 컴퓨터 모니터 생산업체인 대만계 티피브이테크놀로지는 연초 15% 올린 임금의 15~20% 추가 인상 발표 등, 광저우와 선전 중심의 중국 최대 수출기지인 주장삼각주에서 임금인상 도미노 진행.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중국 국내기업들에도 인상 압박. 베이징시는 지난 3일 최저임금 20% 인상을 결정. 다른 지방정부들도 올해 최저임금을 5~27% 올림.

급격한 임금인상의 일차적 결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쏠림. 세계시장에 싸게 공급하던 제품들에 임금인상분이 전가될 것.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위기 전까지 10여년간 세계경제가 즐긴 저인플레이션-고성장이라는 '골디락스 호황'은 다시 기약하기 어렵다는 전망. 당장 팍스콘은 애플, 소니 등 주문업체들에 "세계경제의 먹이사슬이 임금인상 문제에 직면했다"며 납품가 인상을 원한다는 의견 피력.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까지 더하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리라는 예상도 있음(한겨레).

## ■ 한국정세

●천안함 의혹 7가지 '뉴스'..."산에서 고래를 만났다"합조단 언론 3단체 설명회 불구 여전히 의문들 (프레스이안)

합조단은 "살인 사건으로 치면 살해 도구에 해당하는 북한의 어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혹들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합조단은 '실수' 혹은 '세계 최초로 발견된 현상'이라는 말로 의혹을 피해 나갔다.

### 1. 어뢰 설계도 잘못 제시 시인

합조단은 지난달 20일 조사 결과 발표 때 잘못된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음을 시인했다.

### 2. 어뢰 부식 기간 추정할 수 없다

어뢰의 부식 기간 측정에 대해 합조단은 "측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 3. 어뢰 추진체에는 왜 RDX 없고 알루미늄만 있나

어뢰 추진체에 RDX, HMX, TNT 등 폭약 잔해물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도 도마에 올랐다. 선체 표면에서는 알루미늄 산화물과 함께 RDX 등의 폭약 잔해물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뢰 추진체에는 역시 폭약 잔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RDX 등이 전혀 검출이 안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물속에 오래 있어 다 녹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4. 세계 최초의 발견들..."산에서 고래를 만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합조단은 "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발견들"을 무척 강조했다. 실험 방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선 다른 나라들은 어뢰에 피격된 함선을 인양해 조사·분석한 적이 없어, 천안함에서 '비결정 알루미늄 산화물'을 발견한 것이 '세계 최초'라는 설명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산에서 고래를 만난 것과 같은 발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버블제트'에 의한 피격도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평택 현장에서 천안함 함수 아랫부분에 곰팡이처럼 둥글게 찍힌 자국을 두고 "버블제트 흔"이라고 비증을 뒤 설명하기도 했다.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가 흰 점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프로펠러를 몇 십년 해온 사람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흰 이유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 5. 오른쪽만 휘어진 스크루...급정지 관성 때문?

일각에서는 우현 스크루 프로펠러만 흰 것에 대해 '좌초 후 빠져 나오려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조단은 "스크루가 급정지하며 관성력에 의해 스크루 프로펠러가 흰 것"이라는 추론을 내놨다....

### 6. 초병들은 방위각을 잘 모른다?

"(폭발시 물기둥이 솟은) 하얀 불빛을 봤다"는...해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본 '하얀 불빛'은 초소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조단이 주장하는 폭발 원점은 초소에서 남서 방향에 가깝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합조단 관계자는 "초병이 진술한 280도 방향과 폭발 원점은 차이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당시 야간이고 해무가 끼어 있으며, 4km라고 말한 것도 멀다는 표현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고, 폭발 원점은 KNTDS, 지진파 등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7. 사고 해역 TOD는 한 개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해병 TOD 관측병 출신 예비역들은 "중첩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각도에

서 천안함을 촬영한 TOD 동영상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합조단은 "사고 해역을 감시하는 TOD는 한 개였다"고 해명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TOD 초소는 북쪽에 몰려 있고, 사고 해역에는 TOD가 한 개 뿐이어서 중첩 관측이 안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가스터빈실이 공개되기도 했다....가스터빈실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앞으로 이 부분도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공동지방정부' 착수

김두관, 정무부지사에 민노당 강병기씨 내정 (한겨레)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 지방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강병기(49·사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 부지사에 내정했다.

강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 공동의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고 김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경찰,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명 체포 - 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도

한충목 공동대표 등 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29일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최영욱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한 대표 등 3명의 자택과 영등포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후원회인 진보사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진보연대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연행된 3명에 대한 개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2007년 진보연대 출범 전부터 지켜본 인물들로 합법적인 북한 인사들과의 만남은 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곽정숙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현 정권의 정국 전환용 기획수사"라며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9월 출범한 범진보진영의 연합체이며, 지난 12일에는 이 단체의 한상렬 상임고문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0세기 동북아 초토화 '백두산 대폭발', 다시 초읽기?

[인터뷰]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 펴낸 소원주 박사 (프레시안)

.....이뿐만이 아니다.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심상치 않다. 최근 백두산 인근에서 지하의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면 나타나는 화산성 지진이 100회 이상 관측되고 있다. 천지 주변이 융기하고, 인근 온천의 수온이 높아지는 것도 폭발의 징후다. 백두산은 또 한 차례 포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미,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않기로 / 크라울리 차관보 "천안함 도발, 국제테러 아니다" (한겨레)

●정운찬 "세종시는 나의 십자가, 책임진다" / 긴급기자회견서 '국회 부결' 강하게 비난... 사퇴 여부는 안 밝혀 (오마이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세종시 '플러스 알파' 놓고 '2라운드'

●집시법 효력 상실...야간집회 봇물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10조'가 오늘(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야간집회를 할 수 있게 되다.

●타임오프제 'D-데이'...노동계 강경투쟁 vs 정부·재계 강력 대처 노조 전임자수 대폭 축소...노동계 파업 예고에 이면

합의 속출  
<끝>